

경제위기하에서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일본 정부는 2008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네 차례에 걸쳐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긴급대책에 편성된 예산은 첫 번째, 2008년 8월 29일 「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에 약 11.5조 엔, 두 번째, 10월 30일 '생활대책'에 약 26.9조 엔, 세 번째, 12월 19일 '생활방어를 위한 긴급대책'에 약 37조 엔, 그리고 네 번째, 2009년 4월 10일 '경제위기대책'에 15.4조 엔(사업비 56.8조엔)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 중 고용사정의 악화로 실업자가 된 자, 고용위기에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실제로는 당해 기업)에게는 고용조정조성금이 지급되어 고용유지와 함께 교육훈련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고용위기에 있지 않은 피보험자의 경우는 교육훈련급부금 제도를 통하여 개인이 후생노동성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고용사업을 통하여 종업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인데, 이번 경제위기하에서 일본 정부는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에 조금이나마 시사를 주길 기대한다.

■ 긴급인재육성/취업지원기금

먼저,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가 아닌 자(비정규직,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정망으로서 앞으로 3년간 7,000억 엔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지원센터(일본어, 공공직업안정소)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재취직, 생활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개요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직업훈련 및 훈련기간 중 생활보장이다. 직업훈련의 확충으로 신규 성장이나 고용 흡수가 전망되는 분야(의료, 간호, 복지 등)에서 필요한 기본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장기훈련과 재취직에 필요한 IT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대상 인원은 약 35만 명으로 잡고 있다. 또한, 훈련을 받는 자가 주된 생계부양자일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독신자는 월 10만 엔,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월 12만 엔을 지원한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활비를 대출하기로 하였는데, 독신자는 월 5만 엔,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월 8만 엔이 한도이다. 이는 약 3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과 생활보장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약 4,820억 엔으로 책정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이다. 실습형 고용·채용 조성사업으로서 신규 성장·고용흡수 분야 등에서, 충분한 기능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구직자를 실습형 고용으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습형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습생 1인당 월 10만 엔,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엔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직장 체험 등을 통한 채용기업에 대한 조성금으로 간호, 제조업 분야 등에서 직장 체험, 직장 견학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장 체험을 받아들이는 경우 1인당 10만 엔, 채용의 경우 1인당 100만 엔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대상자는 약 2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실습형 고용 등에 투입되는 지원금은 약 1,620억 엔으로 책정되었다.

셋째, 장기실업자 등 재취업지원이다. 장기실업자를 민간 직업소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취업 지원(카운셀링, 재취업 기업의 개척, 세미나 실시 등)이나 취직 후 정착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약 3만 명이 지원 대상자가 될 것이다. 또한, 취업활동 곤란자에 대한 재취업 및 주거/생활지원으로서, 주거를 상실하여 취업활동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민간 직업소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취업 지원(카운셀링, 세미나 실시 등)과 주거/생활지원(주거 제공, 생활/취직활동비 지급)을 같이 실시

하기로 하였는데 약 1만 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실업자 대책으로서는 약 380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상이 긴급인재육성/취업지원기금의 개요인데, 동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능력 분야를 살펴 보기로 한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코스

훈련코스는 크게 나누어 신규성장·고용흡수분야 훈련코스, 직업 횡단적 기술습득 훈련코스과 사회적 사업자 등의 훈련코스가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규성장·고용흡수분야 등 훈련코스

긴급인재육성·취업지원기금에서 실시하기로 한 신규성장·고용흡수분야 등의 훈련코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나누어 기초연습코스(공통)와 실천연습코스(선택)로 나누어진다. 먼저 기초훈련코스를 보면 훈련기간은 6개월이다. 이 훈련은 청년층 등을 배려하여 연습·실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취직에 필요한 기초능력의 양성, 주요 업계·업종에 관련된 단기간의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코스이다. 실천적인 연습을 받기 위한 준비와 구체적인 직종 선택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일반과목으로서는 기초학력의 향상을 위해 수학, 역학, 지리학 등을 교육하고, 기초연습으로는 자기이해, 직업마인드, 표현기술, 인간관계 스킬(커뮤니케이션선 능력), IT 활용스킬 향상(표작성, 표계산 등), 사무처리능력 향상(총무, 경리, 일반사무 등), 제조업 기초력 향상(기초과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이던스와 직장 견학, 직장 체험은 의료, 복지, IT, 교육, 환경, 관광, 농업 등의 업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기초연습코스의 수강자는 코스를 등록할 때 경력 상담을 받고, 잡카드를 교부받는다.

기초연습코스를 수료한 자는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업계·업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취업을 위한 행동 플랜을 책정하고 실천연습코스를 선택하게 된다. 실천연습코스는 훈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다. 실천연습코스는 집합교육과 기업실습을 병행하는 이중형식, 집합교육, 사업주 위탁

형식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훈련 형식을 보면, 의료 분야(의사사무작업보조자)의 경우, 집합교육(3개월)+기업실습(1개월)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호 분야(개호1급/2급)의 경우 집합교육(3개월)+기업실습(2개월), 집합교육/실습(6개월), 또는 사업주 위탁(3개월)이 있다. IT분야(정보처리 기술자)는 집합교육(4개월)+기업실습(2개월), 집합교육(6개월), 사업주 위탁(3개월)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실천연습코스에서는 훈련 분야별로 훈련자에게 경력 맵(Map)을 그리게 하고, 능력 평가기준 등을 활용한 경력 상담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직업횡단적 기술습득훈련코스

이 코스는 문서 작성, 표계산·도표 작성,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등 직업 횡단적인 정보기술 또는 회계·경리 등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는 내용으로서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는 훈련코스이다.

사회적 사업자 등 훈련코스

이는 두 가지 코스로 세분되는데 그 중 워크숍형 훈련은 사회적 사업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직장을 모방한 작업환경에서 워크숍과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집합훈련을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조합한 내용이다. OJT형 훈련은 사회적 사업의 경영, 사업수행 참여에 관련된 OJT(일상 업무를 하면서 행하는 훈련), 사회적 사업경영상 지식습득을 위한 집합교육을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조합한 내용이다.

■ 훈련장려금 및 신규훈련설정장려금

상기한 신규성장·고용흡수분야 등 3개 훈련코스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된다.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동 훈련코스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능력개발 기구(훈련 실시 등을 하는 정부관련 기관)의 인정기준에 맞는 훈련계획을 책정하여 동 기구에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의 심사·인정은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가 실시한다.

훈련계획이 인정된 민간 교육훈련기관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모집한 훈련수강생을 받아들여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크게 나누어 훈련장려금과 신규 훈련설정상려금이 있다. 훈련장려금은 상기의 3코스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수강생 1명당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 표 1 〉 훈련코스별 훈련지원지급액

훈련 코스		지급액 (월 단위)
신규 성장 · 고용흡수 분야 등 훈련코스	기초연습코스	10만엔
	실천연습코스	6만엔
직업횡단적 스킬습득훈련코스		6만엔
사회적 사업자 등 훈련코스		10만엔

신규훈련설정상려금은 제1종 장려금과 제2종 장려금으로 나누어진다. 제1종 장려금은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새로이 상기의 3코스의 교육훈련을 설정 · 창설한 경우, 훈련기간과 훈련수강자의 정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 표 2 〉 훈련기간 훈련생 정원별 신규훈련설정상려금

훈련기간	정원			
	1~9명	10~14명	15~19명	20명이상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1인당 5만엔	50만엔	75만엔	100만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인당 10만엔	100만엔	150만엔	200만엔
9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1인당 15만엔	150만엔	225만엔	300만엔

제2종 장려금은 사회적 사업자 등 훈련코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훈련 실시에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 등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의 4/5가 지급된다. 상한

액은 다음과 같다. 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빌리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의 경우 50만 엔, 시설 개·보수, 실내외 개장, 간판 설치 등 시설 정비를 위한 경비의 경우 400만 엔, 훈련기기, 사무기기 등 훈련에 사용하는 비품 등의 구입 비용의 경우 350만 엔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의 4/5가 지원된다.

■ 맺음말

지난해 경제위기로 일본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0월 3.8%에서 2009년 5월 5.2%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유효구인배율도 같은 기간 0.8배에서 0.4배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업능력이 낮은 근로자의 취업은 매우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자가 된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자도 있는데, 그들의 경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직업능력개발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긴급지원 정책이었다. 어려운 고용사정하에서 그들의 직업 의식을 높이고, 직업능력을 높임으로써 채용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책정된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 하겠다.

위의 직업능력개발과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총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실업자가 상기 정책의 혜택을 볼는지 주목되고 있다. 예정 대상자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면 취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위기와 어려운 고용사정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상기의 일본 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대책에 조금이라도 시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KLI**

[참고자료]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http://www.mhlw.go.jp/houdou/2009/07/h0715-1.html>
<http://www.mhlw.go.jp/bunya/nouryoku/training/index.html>